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24 / Dec. 2018

12

재정 인사이드

재정칼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과 개선방향
대학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개선방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제도 방향

툏아보기

교육 분야 예산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2018년 재정 여건과 주요 이슈
급변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따른 정부의 선택,
ISMS-P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선물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상대를 배려한 작은 선물 기쁨과 행복은 무한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리는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저렴하고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담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은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세심하게 진행시키는 재정 업무,

우리 사회에 건네는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사람과 상황을 고려한 선물 같은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DECEMBER
2018 Vol. 24

재정 인사이트

06 재정칼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과 개선방향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학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개선방향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제도(製圖) 방향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15 톨아보기

교육 분야 예산

재정과 정보

20 이슈포커스

2018년 재정 여건과 주요 이슈
급변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따른 정부의 선택, ISMS-P

3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보건 분야

46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한류

50 해외재정동향

유럽 주요국의 2019년 경제·재정 전망 및
예산안 주요내용

58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⑫

고대 문명의 발전과 재정의 상관관계

6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6



12



32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재정칼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과 개선방향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학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개선방향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아교육자원특별회계의 제도(製圖) 방향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툼아보기

교육 분야 예산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gcgu@kyonggi.ac.kr

PUBLIC FINANCE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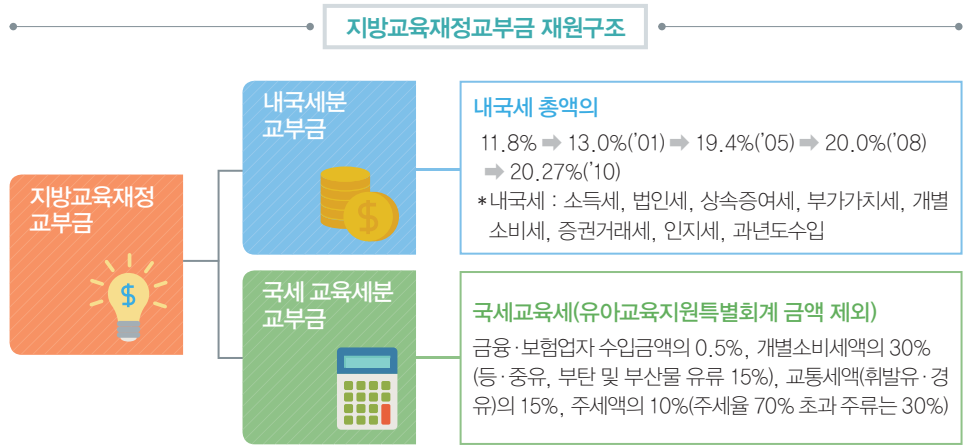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과 개선방향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유인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제도 하에서는 항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재정분권 강화와 교육투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는 기존의 교육재정제도로는 달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 강화나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협력 혹은 통합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분권이 점증하는 교육재원의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전재원의 배분방식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등)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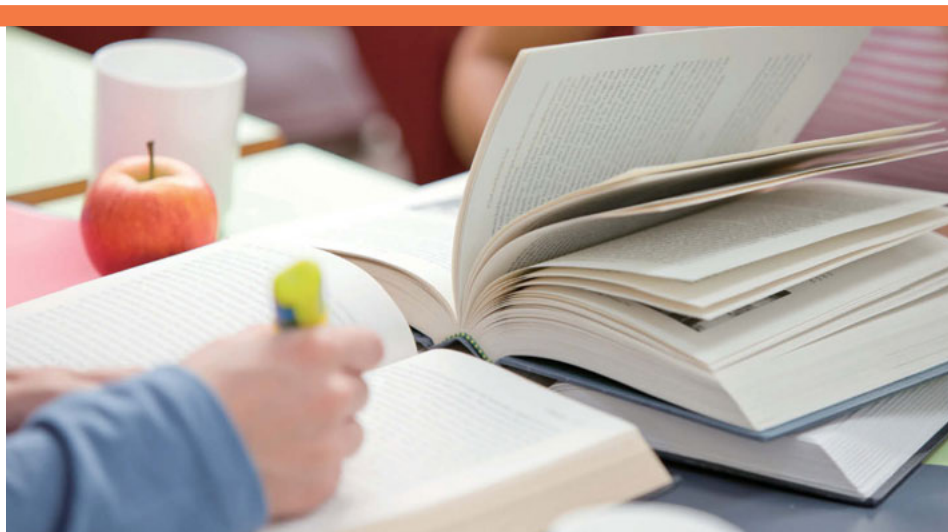
도교육청 재정 규모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내국세분과 국세 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금액 제외)을 통해 조성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미국의 최소재원보장형 교육재정제도(foundation system)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각 교육구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최소재원보장형은 중앙집권형 교육재정제도와 지방분권형 교육재정제도의 특성을 모두 구현한 것으로서 국가최소수준의 학생 1인당 교육지출은 주정부가 충당하는 동시에 각 교육구도 지방교육세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투자를 늘일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제도는 이를 다소 수정하여,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최소수준의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는 지방교육세와 같은 법정전입금과 더불어 비법정전입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과 같은 자발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구조이다.

사실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출직인 시도지사과 시군구청장들에게 공교육 투자는 매우 중요한 정책 사안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세율의 인상이나 비법정전입금을 통해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즉,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최소재원보장형 교육재정제도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1원 증가했을 때 그 만큼이 교육투자가 아닌 지방교육세의 감세로 이어지는 구축효과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부적합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





식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노력을 유도하는 두 가지 형태의 유인체계(매칭형과 경합형)를 도입한 교육재정제도를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칭형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는 미국에서 공통과표보장형(guaranteed tax-base system)으로 불리며,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과세기반의 차이를 보정하고자 일정수준 이하의 과세기반을 가진 교육구는 스스로 결정한 세율을 공통수준의 과표(공통과표)에 곱하여 교육재정수입을 결정하고 그 이외의 교육구는 그 지역의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즉, 공통과표보다 실제로 낮은 과표 수준을 지닌 교육구는 그 차이만큼을 대응교부금으로 받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대응교부금이 없는 바, 지역 간 지방교육투자의 한계비용이 서로 달라진다. 대응교부금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교육투자의 상대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합형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는 지방정부의 교육투자에 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지역 간 유효지방교육세율의 경합을 통해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부분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전국 지방교육세율의 평균치보다 높은 세율을 결정한 지방정부는 그에 상응하여 더 많이 이전재원을 획득하고, 이 평균세율보다 낮은 지방교육세율을 선택한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이전받게 된다. 이 때, 지역별 세원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지역 간 교육투자 격차를 완화하고자 교부금의 배분공식에서 지역별 평균소득의 역수를 해당 지역의 형평화가중치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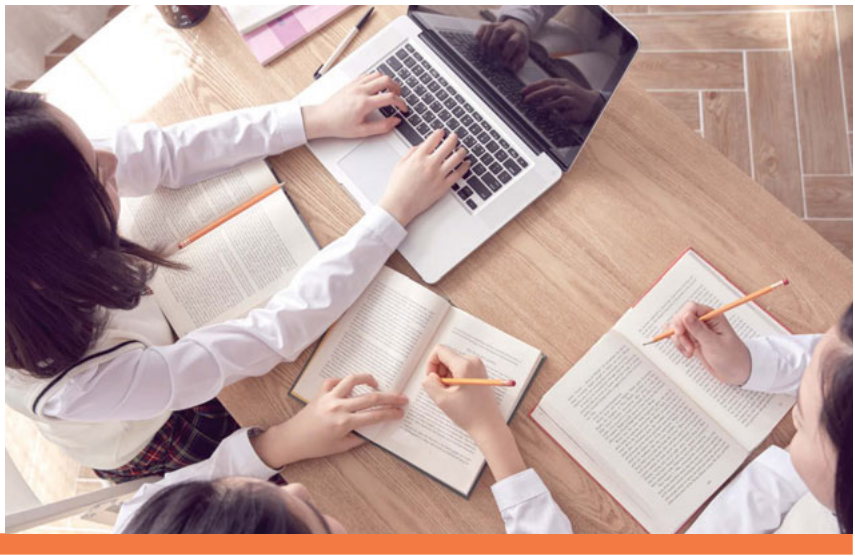
요컨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교육투자 자구노력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신장이나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분권이 교육재원의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감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전재원의 배분방식을 섬세히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라재정

대학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개선방향



대학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학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해보고 싶다. 대학 입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자면 입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은 놀라우리만큼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과거 상당기간 동안 대학교육 재정의 초점은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와 관련되기보다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같은 교육비 부담 완화에만 맞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반값등록금이 대학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정책은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대학교육비의 절반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암묵적 목표를 가진 것이다. 대학교육 재정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재정지원 규모나 대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반값등록금을 정부 재정지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



기는 불충분하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본질적으로 불공평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대학에 갈 확률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평생 높은 임금을 받으며, 평균적으로 늦은 나이에 은퇴한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은 평생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된다. 즉, 대학교육의 경제적 혜택은 실재하며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학교육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며, 따라서 대학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적절한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를 믿고 대학교육까지 받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건 교육시킨 국가 책임이므로 정부와 국가가 취직도 시켜달라'는 주장은 지나치다.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을지 모르나 대학교육을 정부의 의무라고까지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통해 대학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제약으로 인해 대학에서 공부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대학



에 다니지 못하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의 창출과 전달이라는 대학의 역할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할 가치가 충분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정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기초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활동 등에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의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지원은 개인 단위 외에도 학교 내 사업단이나 개별 대학 단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교육부의 재정정책의 기초는 개별 대학 단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각 대학의 사정은 그 대학이 가장 잘 안다. 대학이 정부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발전 방향을 정하고 그러한 발전방향에 합당하게 대학 내부의 재정배분을 효율화하는 것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물론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는 원칙 하에서도 재정지원에 따른 책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기관에 대한 지원은 적절한 평가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 현재와 같이 교육부의 주도로 대학의 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평가지표들이 개별 대학들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맞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재정지원에 수반되는 정부의 규제가 과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책무가 반드시 행정 부담을 수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의적인 지표, 조작이 가능한 지표보다는 대학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지표들이 평가에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로서 학자금대출의 상환 정도는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좋은 지표라 판단된다. 물론 취업이나 높은 임금이 대학교육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대학 당국이 그들의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은 각종 투입에 대한 평가나 규제에 비해서는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판단된다.

정리해 보자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개인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선별된 학생과 연구자 등 개인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되, 기관에 대한 지원은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대학 당국이 재정지원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쯤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식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학의 교육이 대학 입시보다 몇 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광재**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chaelee@nafi.re.kr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제도(製圖) 방향



2016년 12월, 2017회계연도 예산안 가결과 함께 누리과정 재원분담 논란을 잠재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에 도입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공통 보육·유아교육과정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추진을 위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었고,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재정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5년간 지속되었다. 누리과정에 투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2조 6,481억 원에서 2015년 3조 9,732억 원으로 연평균 14.5% 증가하였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지방교육채를 발행(2016년 기준 3조 1,259억 원)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3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2019년까지는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한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2017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의 일부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국고) 전입을 통해, 유특회계 설

치·운영을 위한 3조 9,409억 원이 편성(교육세 78%, 국고 33%)되었다. 2018년부터는 유특회계의 재원을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고, 2018년 3조 8,927억 원, 2019년 3조 7,440억 원이 각각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제 1년 뒤면 3년 한시로 도입된 유특회계의 만료 시점이 도래한다. 내년 이맘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특회계의 단순 존치여부만을 결정하기에는 언제든지 누리과정 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기한 연장 혹은 일반회계 전환 추진 이전에,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논란이 되어왔던 위험요인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7년 간 누리과정 추진을 통하여 막대한 나랏돈이 사립유치원에 흘러 들어갔으나, 회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의 차이에 대한 조정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 이용대상, 운영시간, 교사자격 등의 측면에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 운영되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 수준이며,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필요경비가 추가될 수 있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가량 운영되며,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교육기관이다. 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는 정부가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정부가 지급하는 유아학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아 대상 보육·교육과정과 보육료·유아학비 재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 외의 정보공시, 평가인증, 재무회계규칙, 교사 자격·처우 등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유아교육지원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역할 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이 2018년 1월 유보통합추진단의 4년 임기가 끝났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先) 인프라 구축, 후(後) 부처 통합을 고민하였다. 정보공시 내용을 확대·연계·통합하고,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며, 공통 재무회계규칙 항목 개발 등을 수행한 뒤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부처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차이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정부의 관리가 허술해진 틈새에서 비리가 자라난 것이다.

유아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지원체계와 유특회계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1997년부터 제기된 유보통합이



Preschooler School expenses

20년 넘게 답보상태인 이유는 부처 권한 통합과 교사 간 격차 해소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일원화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누리과정 재원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유특회계를 도입하고 전액 국고로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돈으로 회계감사의 대상이지만,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유치원 원비를 지급하면 유치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누리과정 재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시설 이용률은 21.1%로, OECD 평균(66.9%)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신규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저출산에 따른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요 감소와 정책의 적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 소요가 긴 국공립시설 신축보다는 기존의 민간·사립 시설을 공공형 시설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구감소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인프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특회계는 국민이 뽑은 '2016년 정책 MVP'에 선정되었다.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시작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재정 갈등을 봉합해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는 유특회계를 좀 더 다듬을 시점이다. 중앙-지방 간 재정 갈등 완화에 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한 조치를 동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존치, 일반회계 전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남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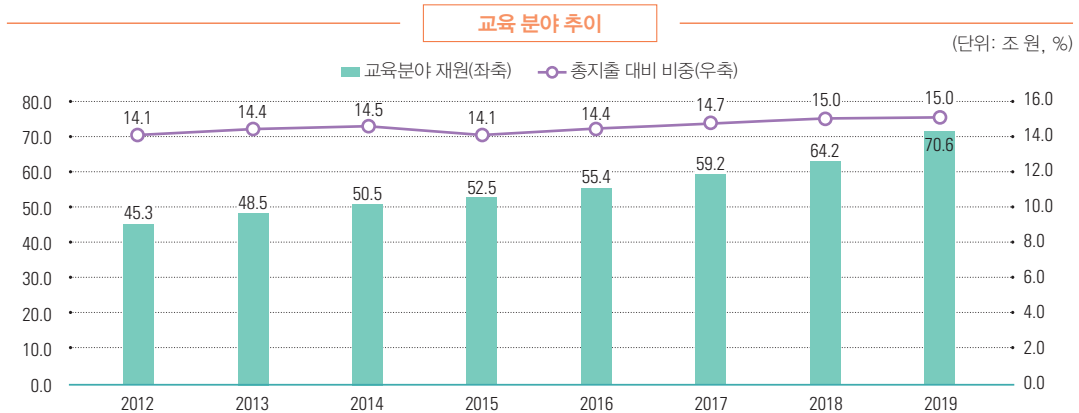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교육 분야 예산

교육 분야 예산은 2012년 45.3조 원에서 2019년 본예산 기준 70.6조 원으로 연평균 6.6%로 증가

- 총지출 대비 교육 분야 예산 비중은 2015년 14.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5.0%이며, 2019년 본예산에서도 15.0%로 편성
- 2012~2019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6%)보다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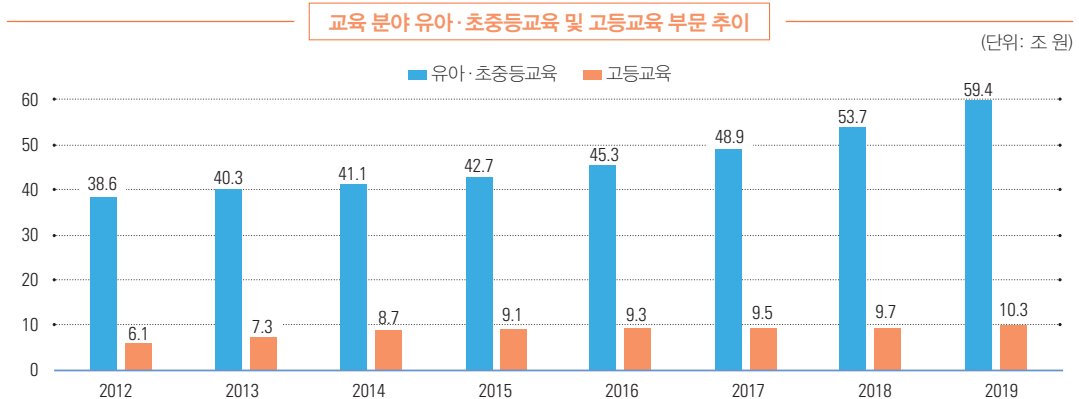
주 1) 2012~2017년 결산기준,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2)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 70.6조 원 중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이 8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대비 10.6% 증가(2018년 53.7조 원 → 2019년 59.4조 원), 고등교육 6.0% 증가(2018년 9.7조 원 → 2019년 10.3조 원), 평생·직업교육 30.2% 증가(2018년 0.7조 원 → 2019년 0.9조 원), 교육일반 3.7%(2018년 0.1조 원 → 2019년 0.1조 원) 증가
-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2012년 38.6조 원에서 연평균 6.3% 증가하여 2019년 59.4조 원
- 고등교육 부문은 2012년 6.1조 원에서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9년 10.3조 원



주 1) 2012~2017년 결산기준,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2)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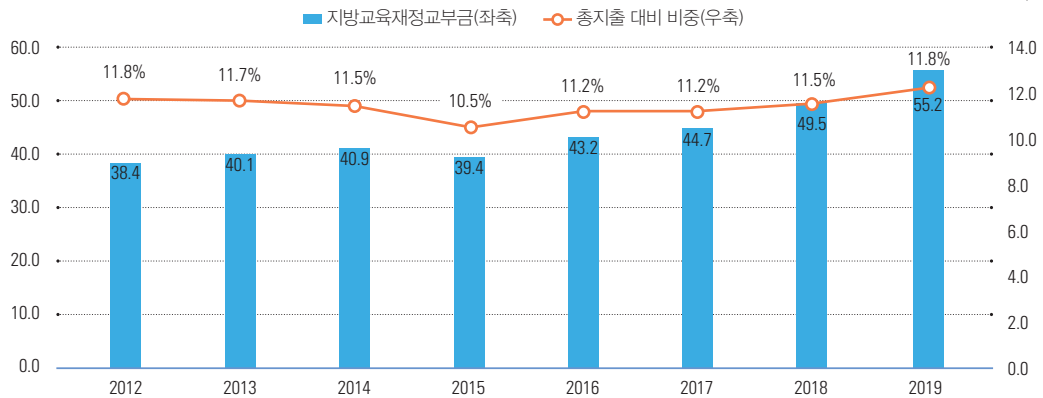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38.4조 원에서 연평균 5.3% 증가하여 2019년 본예산 기준 55.2조 원 규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보통·특별 교부금으로 구성
-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27%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조 원, %)



주 1) 2012~2017년 결산기준,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2) 총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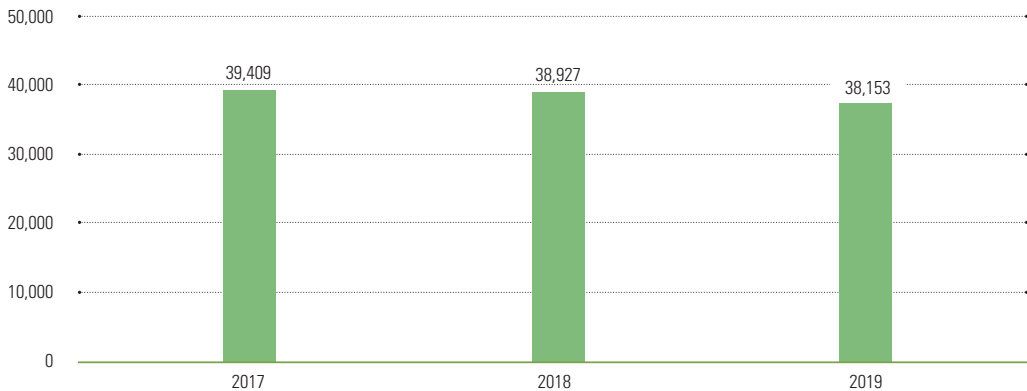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지원 대상아(만 3~5세) 수 감소로 2017년 3.9조 원에서 2019년 3.8조 원으로 감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교육 및 보육 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7년 설치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구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추이

(단위: 억 원)



주 1) 2017,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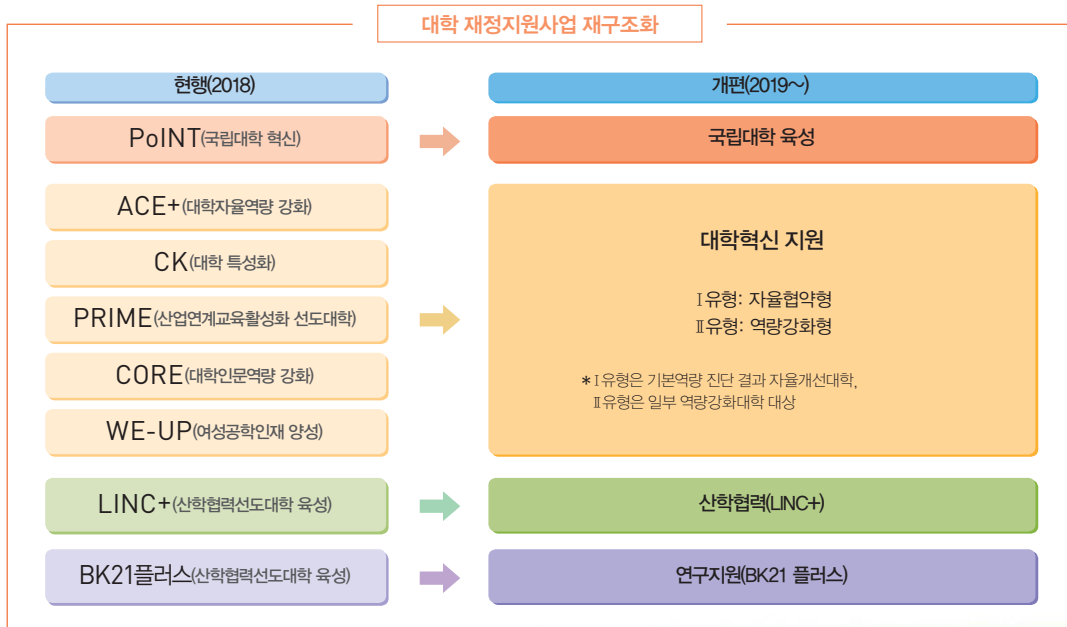
2)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안」에서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기존 8개 사업을 4개 사업으로 재구조화 하는 개편 추진

• 2018년 8개 사업 1.1조 원에서 2019년 4개 사업 1.4조 원으로 개편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2018년 재정 여건과 주요 이슈

급변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따른 정부의 선택, ISMS-P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보건 분야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한류

해외재정동향

유럽 주요국의 2019년 경제·재정 전망 및 예산안 주요내용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고대 문명의 발전과 재정의 상관관계

2018년 재정 여건과 주요 이슈

한승희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2019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12월 8일 의결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18년의 재정 여건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본다. 2018년도 재정 여건을 경제·사회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한해 동안 어떤 주요 재정이슈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며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2018년 재정 여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국제과제로 채택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고용시장 악화와 자동차, 조선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2018년 예산안 편성시점에 전망한 3.0%의

〈표1〉 주요 경제지표

	2017년 실적	예산안 편성시점 2018년 전망 ¹⁾	2018년 실적			2018년 수정전망 ²⁾⁴⁾
			1분기	2분기	3분기 ³⁾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	3.1	3.0	2.8	2.8	2.0	2.9
취업자증감 (전년동기비, 만 명)	31.6	36.0	18.3	10.1	1.7	18.0
소비자물가(%)	1.9	1.8	1.3	1.5	1.6	1.6
경상수지(억 달러)	785.0	705.0	118.0	178.3	280.3	640.0
세계경제성장률(%)	3.7	—	—	—	—	3.7

주 1) 기획재정부, 「2018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7.25.

2) 기획재정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2018.7.18.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최종검색일: 2018.12.10.

4) IMF,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¹.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2.8%이며, 2분기 2.8%, 3분기 2.0%로, 예산안 편성 시 경제전망과 수정전망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8년 고용실적도 예산안 편성시점 전망과 수정 전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전년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1.6만 명이며, 예산 편성 당시 2018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은 36만 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2018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8.3만 명, 2분기 10.1만 명, 3분기 1.7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². 높은 청년(15~29세)실업률은 고용시장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1분기 10.0%, 2분기 10.1%까지 증가하였다. <표2>를 보면 30세 이상 실업률과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실업률 현황

(단위: %)

	2017년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실업률 (계절 조정)	4.3 3.7	3.8 3.7	3.4 3.7	3.2 3.7	4.3 3.7	3.9 3.8	3.8 4.0
15~29세	10.7	10.3	9.3	9.0	10.0	10.1	9.4
30~39세	3.6	3.4	3.0	3.0	3.3	3.6	3.6
40~49세	2.4	2.4	2.0	1.8	2.5	2.5	2.6
50~59세	2.2	2.4	2.3	1.8	2.5	2.6	2.6
60세 이상	4.8	2.3	2.2	2.2	5.4	2.5	2.3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20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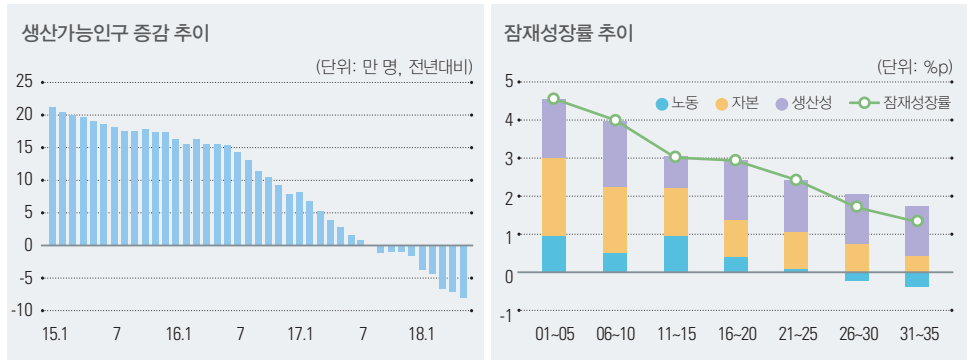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년~2065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65년 2,0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대비 206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3.4%에서 47.9%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8%에서 42.5%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저출산으로 인해 합계출산율³과 출생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 명에서 2017년 35.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을 감소시켜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¹ 정부는 2018년 7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하여 편성시점 대비 0.1%p 낮춘 2.9%로 발표하였다.

² 다만 2018년 9월부터 전년동기 대비 4.5만 명, 10월 6.4만 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³ 합계출산율이란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그림1〉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자료: 통계청

자료: KDI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도 각 연도의 출생아수는 40만 명이 유지(중위 추계 기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7년 출생아 수는 35.8만 명으로, 이 수치는 저 위추계 출생아수 전망보다 낮다. 2017년 합계출산율 또한 1.05명으로 통계청의 저위추계 인구전망 수치(1.14)보다 낮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2017년보다 감소하여 1명 아래로 떨어 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표3〉 통계청의 인구전망과 실제

(단위: 천 명, 가임여자 1명당)

	중위추계		고위추계		저위추계		실제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
2015년	427	1.24	427	1.24	427	1.24	438	1.24
2016년	413	1.18	427	1.20	400	1.16	406	1.17
2017년	413	1.20	439	1.27	387	1.14	358	1.05
2018년	411	1.22	447	1.31	376	1.13	-	-
2019년	410	1.23	453	1.35	368	1.11	-	-
2020년	409	1.24	460	1.38	360	1.10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8.12.

2018년 주요 이슈

1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는 2018년 428.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등 고용문제가 심각하여 정부는 총 3.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8년 4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예산안은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하

〈표4〉 한국의 주요 재정지표

	2017년 결산	2018년		증감(B-A)
		본예산(A)	추경(B)	
지출규모(조 원)	406.6	428.8	432.7	3.9
관리재정수지(조 원)	-18.5	-28.5	-31.4	-2.9
GDP 대비(%)	(-1.1)	(-1.7)	(-1.7)	-
국가채무(조 원)	660.7	708.2	700.5	-7.7
GDP 대비(%)	(38.2)	(39.5)	(38.6)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였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에 남은 결산 잉여금과 기금의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2.9조 원을 편성하였다. 39만 명에 달하는 예코뽀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향후 3~4년 동안 고용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대책을 살펴보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인 9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기존 정책보다 대상기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단가도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

〈표5〉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

총 규모(조 원)	3.9	주요사업
• 청년 일자리 대책	2.9	= 일반회계 1.9 + 기금 1.0
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7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신단재직자 교통비 지원, 이공계 학·석사 취업 지원,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등
② 창업 활성화	0.8	• 기술창업·생활창업 지원, Post TIPS 신설, 혁신모험 펀드 출자, 청년 창업농 지원 등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0.2	• 지역 청년 일자리, KOICA 장기봉사단 등
④ 선취업·후진학 지원	0.1	• 고졸자 취업장려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 등
⑤ 취·창업 실질 역량 강화	0.1	• 4차 산업혁명 인력 육성, 대중소상생 교육훈련, 장병 취·창업 교육,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1.0	= 일반회계 0.7 (목적예비비 0.25 포함) + 기금 0.3
① 근로자·실직자 지원	0.1	• 고용유지지원금, 퇴직인력 전직교육·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활안정대부·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등
② 지역기업·협력업체	0.4	• 경영안정자금, R&D지원, 산업다각화 지원 등
③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0.2	• 소상공인융자, 청년몰 조성, 관광콘텐츠 확충 등
④ 목적예비비	0.25	• 위기지역 추가소요·추가 위기지역 지정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하였다. 이를 통해 약 4.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학사와 석사가 산학협력 R&D에 참여한 이후 사전에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취업자가 3년 간 근무할 경우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1,800만 원, 기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600만 원을 지원해준다. 기존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내일채움공제)하였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 동안 1.2%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신규 10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하였다.

군산, 통영 등 자동차와 조선업 밀집지역의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단기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약 1.0조 원을 편성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완성차와 부품산업 종사자는 35.5만 명(전체 제조업의 12%)에 달하며, 조선업 관련 종사자는 16.4만 명(전체 제조업의 6%)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지역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대부 지원을 확대하였다. 완성차업체 퇴직자, 중견조선업체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내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및 전환자금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를 1,000억 원 추가로 공급하였으며, 우수 청년 상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복합청년몰 사업을 확대하였다.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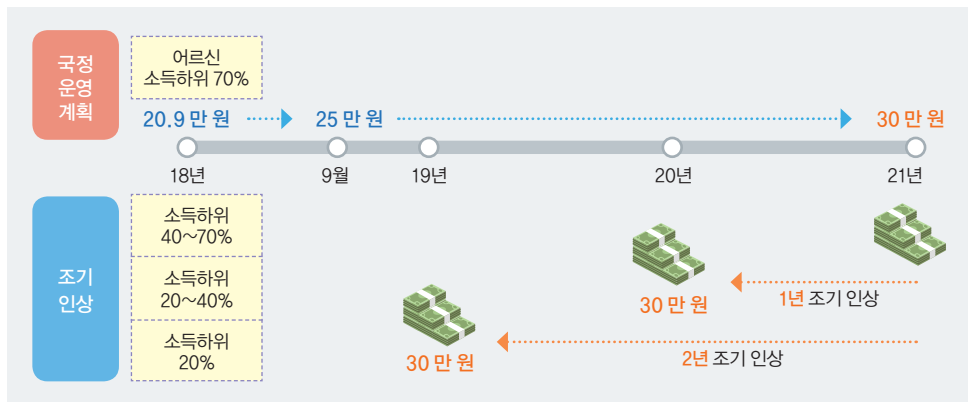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향후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도 월 21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지원금액 확대로 인해 약 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을 예상되며,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기존 계획보다 2년 앞선 것으로, 이를 통해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20%~40%의 노인은 20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2〉 기초연금의 조기 인상



3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상용노동자 기준)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을 위해 올해 약 3.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9년에는 30~300인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01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예산편성 시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구축하여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약 한 달간 국민들의 예산사

업 제안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206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이 제안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성, 연령,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춘 300명이 예산국민참여단을 선정하여 4일간 제안된 사업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하였다. 여기에 일반국민 1,000명의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 내년 예산안에 적용할 사업을 확정하였다. 2019년 예산안에 총 39개 사업, 835억 원이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노후 산업단지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부스형 쉼터, 이끼 벤치 설치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먹거리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추진하였다.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을 발의(2018년 3월)하였으며, 그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이 국회를 통과(2018년 9월)되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스톡옵션 비과세를 부활하며,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였다. 미래차, 핀테크,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등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방안을 수립하여 2019년에도 혁신성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주요 정책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을 독려하고 결산 시 집행성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

〈표6〉 2018~2022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8~2022년 연평균
총지출	428.8	470.5	504.6	535.9	567.6	7.3
1. 보건·복지·고용	144.6	162.2	179.0	196.4	214.3	10.3
2. 교육	64.2	70.9	76.0	80.1	84.0	7.0
3. 문화·체육·관광	6.5	7.1	7.4	7.8	8.0	5.5
4. R&D	19.7	20.4	21.4	22.6	24.0	5.2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19.4	19.9	20.2	5.5
6. SOC	19.0	18.5	18.0	17.7	17.5	-2.0
7. 농림·수산·식품	19.7	19.9	19.8	19.7	19.6	-0.1
8. 환경	6.9	7.1	7.0	6.9	6.7	-0.5
9. 국방	43.2	46.7	49.9	52.8	55.5	6.5
10. 외교·통일	4.7	5.1	5.4	5.7	6.0	6.3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20.9	21.7	22.6	4.3
12. 일반·지방행정	69.0	77.9	84.1	89.2	94.0	8.0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8



〈표7〉 국가채무전망

(단위: 조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GDP 대비 %)	(39.5)	(39.4)	(40.2)	(40.9)	(41.6)

주: 2018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8

소득 양극화 완화에 투입되는 재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출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출혁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본예산은 469.6조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9.6% 증가하였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인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인 7.3%보다 높다. 또한 2019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1.0조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16.4조 원) 증가하여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인 10.3% 보다 높다. 이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예산 등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확대는 채무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0.2%로, 2020년을 기점으로 채무비율은 40%를 넘어 202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7〉 참고). 정부는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GDP 대비 채무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계획이 달성되려면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178조 원 규모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세와 세외수입 확충으로 82.6조 원, 세출절감으로 95.4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 35.2조 원은 기금여유자금 활용과 이자보전을 통해 마련하며, 60.2조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10.4조 원, 2019년 예산안에서 12.4조 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활용,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방식 도입 등을 추진하는 <지출혁신 2.0>⁴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fiscal space)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없는지 검토하고,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저성과 사업, 유사·중복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름**

4. 지출구조 개혁단을 구성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확정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따른 정부의 선택, ISMS-P

최현우

e나라도움 운영단 개인정보TF팀 사원

chyw@kpfis.kr



인증 개요

최근 국내·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차세대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위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량의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운영하며 기업의 보안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두 인증의 유사한 심사항목과 인증제도의 개별적 운영은 기업에게 재정 및 인력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두 가지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통합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① 국내 보안 인증 운영현황

국내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ISMS 인증과 PIMS 인증은 서로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고 개정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이 동일·유사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으로 통합하였다. ISMS-P 인증은 두 인증제도에서 밀접한 부분인 시스템 운영 항목은 통합하고 개인정보보호 같은 특화항목은 추가하여 만들어졌다. 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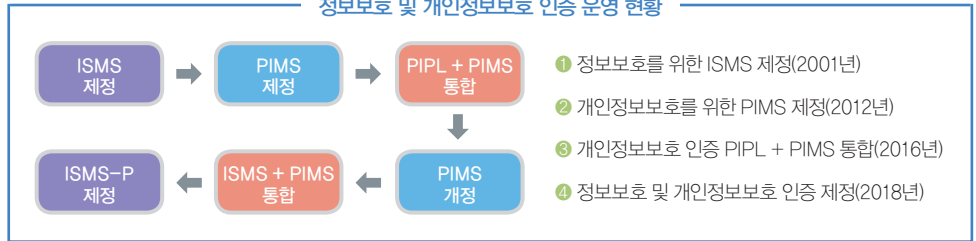
①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②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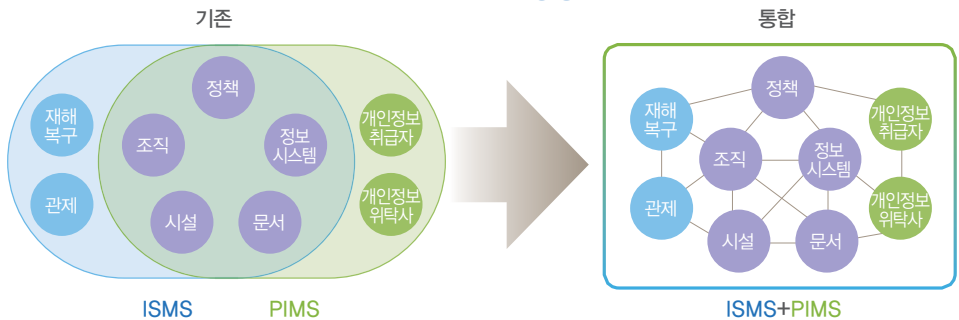
업은 인증 취득을 통해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다.

ISMS 인증기준 104개, PIMS 인증기준 86개를 비교한 결과, 유사·공통기준이 각각 82개, 58개로 분석되어 ISMS-P에서는 통합항목 80개, 개인정보 특화항목 22개로 통합하였다.

ISMS, PIMS, ISMS-P 인증 비교

인증	정보보호인증(ISMS)		개인정보보호인증(PIM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내용	기술적, 물리적 보안조치를 포함한 종합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주는 인증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활동을 확인하는 통합 인증	
심사 항목	104개	유사·공통 82개 고유항목 22개	86개	유사·공통 58개 고유항목 28개	102개	통합항목 80개 개인정보 특화항목 22개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	

ISMS와 PIMS 인증 통합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② 통합 인증 기대효과

ISMS-P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안전한 정보관리 및 운영을 식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 기업의 내부정보 및 재화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을 일원화시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준다.

- ① 기존 두 가지 인증제도(ISMS·PIMS)의 개별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및 재정·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②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재해·재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③ 경영진의 보안업무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안사고 과징금 경감

인증 취득기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경감이 고려됨

ISMS-P 기대효과

ISMS·PIMS 인증제도 통합을 통해 복수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혼란 해소 ‘통합이 필요하다’ 59.9% 2016년 기업 대상 ISMS 인증제도 인식조사 설문	융합화·고도화 되는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정보시스템(ISMS)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흐름(PIMS) 상에서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 PIMS, ISMS 인증 모두 유지 72% PIMS 인증을 유지하는 75개 기업 중 54개 기업이 ISMS 인증을 함께 유지 (2018년 10월)	신청기관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행정·인력 부담 절감 ISMS, PIMS 제도 개별 운영 중인 행정절차 및 인증심사 절차를 통합 ‘타 규제저도와의 중복에 따른 비용·행정·인력적 부담이 가장 크다’ 2016년 기업 대상 ISMS 인증제도 인식조사 설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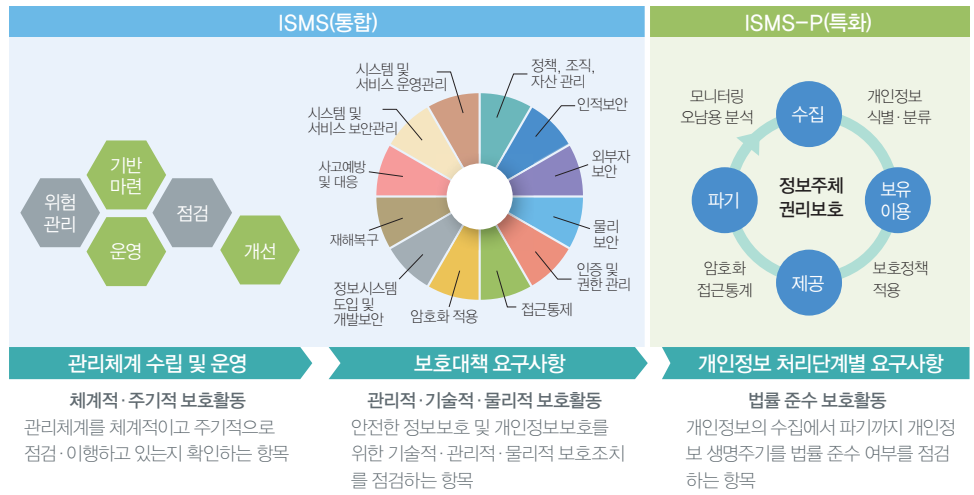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ISMS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①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②보호대책 요구사항 기준이 적용되며, ISMS-P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ISMS 인증 기준에 추가로 ③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을 함께 받으면 된다.

인증심사는 총 102개 항목으로 진행하며 유사·중복 항목은 통합 및 재배치하였다. 또한 클라우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세부 기준표

유형	항목수	적용기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	1. 관리체계 기반마련	6
		2. 위험관리	4
		3. 관리체계 운영	3
		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
보호대책 요구사항	64	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3
		2. 인적보안	6
		3. 외부자 보안	4
		4. 물리보안	7
		5. 인증 및 권한 관리	6
		6. 접근통제	7
		7. 암호화적용	2
		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6
		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7
		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9
		11. 사고예방 및 대응	5
		12. 재해복구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	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7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5
		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
		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4
		5. 정보주체 권리보호	3
합계			102

● 정보보호(통합) / ● 개인정보보호(특화)

드 서비스, 핀테크 등 최신 기술과 이슈를 신규 기준과 기존항목으로 개선·수립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 강화된 보호조치를 반영하였다.



인증대상 및 절차

① 인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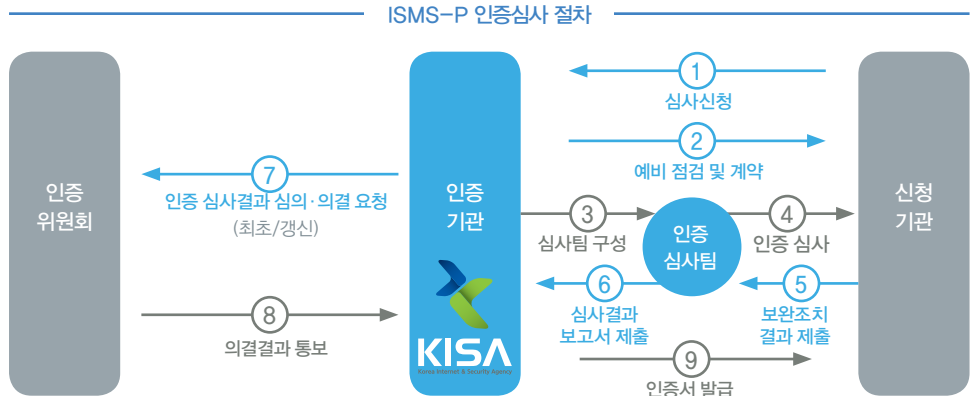
인증대상은 자율신청자와 의무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신청자의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인증을 신청·취득 할 수 있다. 의무대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무대상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ISMS-P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인증대상 분류표

구분		기준
자율 신청자	-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
의무 대상자 (ISMS)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직접정보통신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② 인증절차

ISMS-P인증은 신청 ▶ 계약 ▶ 심사 ▶ 인증 4단계로 구성되며 인증 신청기관은 인증 심사기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인증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며, 최종 결과를 확인하여 인증 신청기관에게 인증 취득 결과를 통보한다.



- ① 신청단계: 신청공문 + 인증신청서, 관리체계운영 명세서, 법인/개인 사업자 등록증
- ② 계약단계: 수수료 산정 > 계약 수수료 > 납부
- ③ 심사단계: 인증심사 > 결함보고서 > 보완조치내역서
- ④ 인증단계: 최초/갱신심사 심의 의결(인증위원회), 유지(인증기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신청 조건

인증심사 신청 기관은 인증심사 이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만 인증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맺음말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 이슈였던 랜섬웨어 공격은 강력한 암호화기술과 다양한 전파경로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기관, 기업,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런 사이버 위협은 여전히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더욱 고도화되고 위험해지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의 보안 영역 확대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ISMS-P 인증은 그동안 분리되었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평**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01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재정운용동향

총수입
403.3조 원

총지출
374.6조 원

통합재정수지
28.7조 원

관리재정수지
-5.7조 원

2018년 10월 중 총수입은 44.1조 원, 총지출은 29.5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403.3조 원으로 진도율은 90.1%이고 전년 동기 대비 30.8조 원 증가(진도율 2.0%p 상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74.6조 원으로 진도율은 86.6%이고 전년 동기 대비 29.4조 원 증가(진도율 2.4%p 상승)하였다.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수입 (진도율)	372.4 (88.0)	399.2	430.6	50.8	77.4	121.2	169.9	214.0	243.8	291.9	327.1	359.2	403.3 (90.1)
총지출 (진도율)	345.2 (84.2)	370.0	406.6	35.8	76.5	122.9	169.6	205.3	247.3	282.7	311.1	345.2	374.6 (86.6)
통합재정수지	27.2	29.2	24.0	15.0	0.9	-1.8	0.2	8.7	-3.5	9.8	16.0	14.0	28.7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6	37.9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34.3
관리재정수지	-7.4	-8.8	-18.5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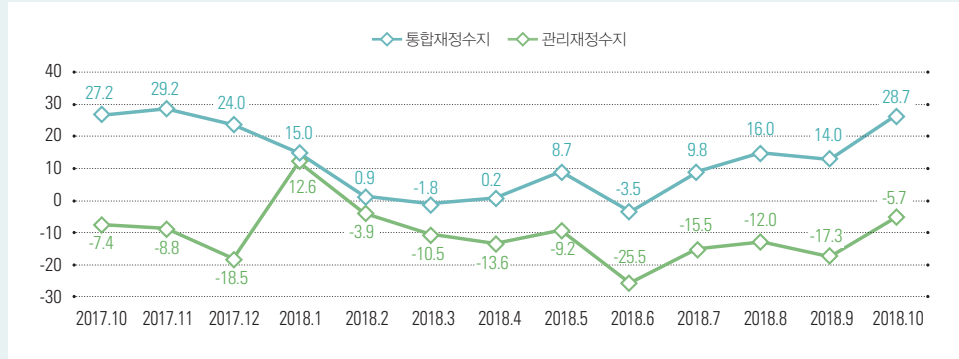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8.7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7조 원 개선되었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추이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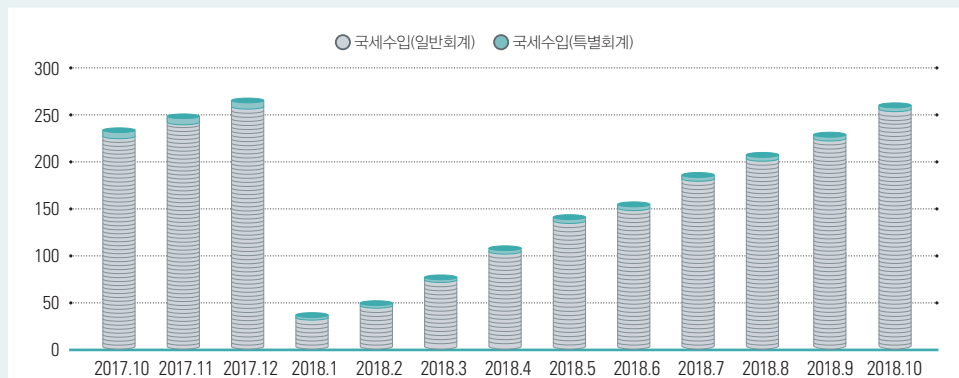
256.7 조 원

특별회계

6.7 조 원

2018년 10월 중 국세수입은 29.7조 원(부가가치세 15.6조 원, 소득세 6.0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63.4조 원이며, 일반회계 256.7조 원과 특별회계 6.7조 원으로 구성된다.

(단위: 조 원)



	2017년			20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국세수입	236.9	251.9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213.2	233.7	263.4
일반회계	231.0	245.7	258.5	35.4	48.4	76.8	106.6	137.0	152.9	184.9	207.6	227.7	256.7
특별회계	6.0	6.3	6.9	1.2	1.5	2.0	3.2	3.8	4.3	5.3	5.6	6.0	6.7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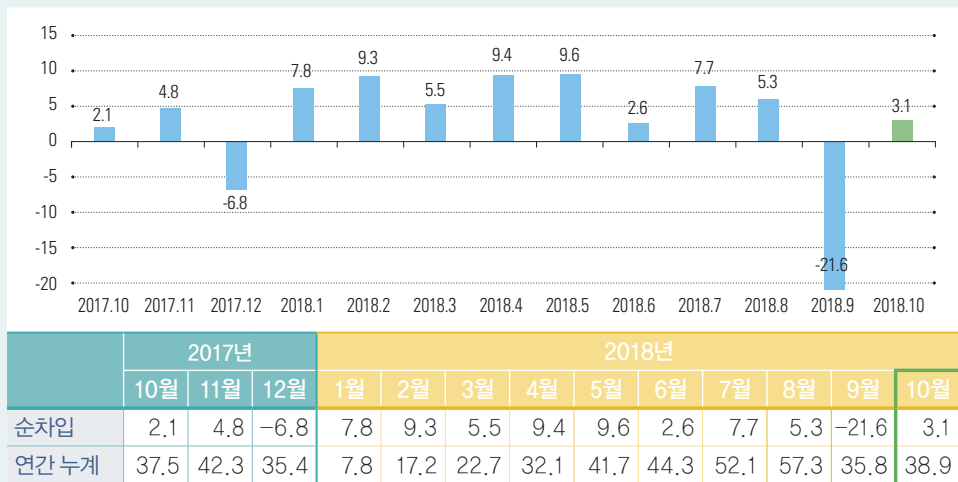
순차입 추이

순차입 전월 대비

3.1 조 원

2018년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2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2.0조 원), 외평채권 잔액 증가(1.3조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0.1조 원)에 따라 전월 대비 3.1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10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1.0조 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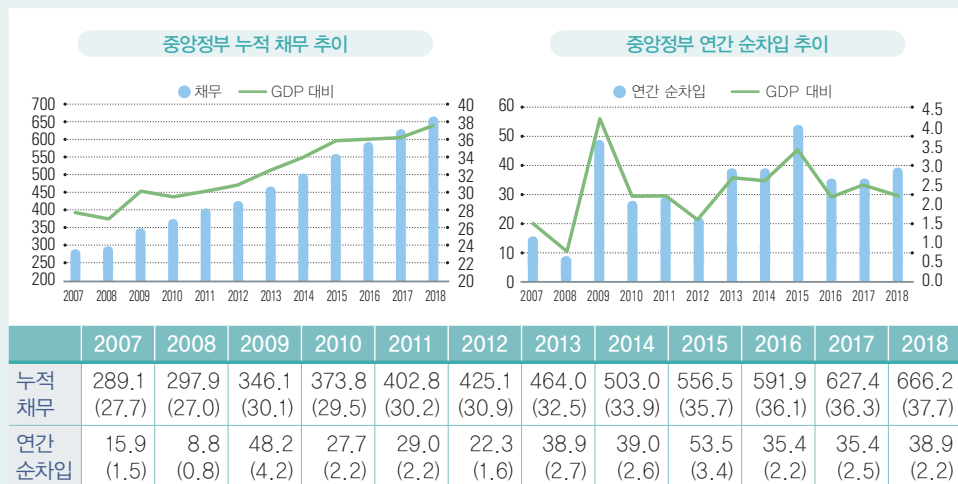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중앙정부

채무 추이

누적 채무

666.2조 원



주 1)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

2) 2018년 GDP는 한국은행 전망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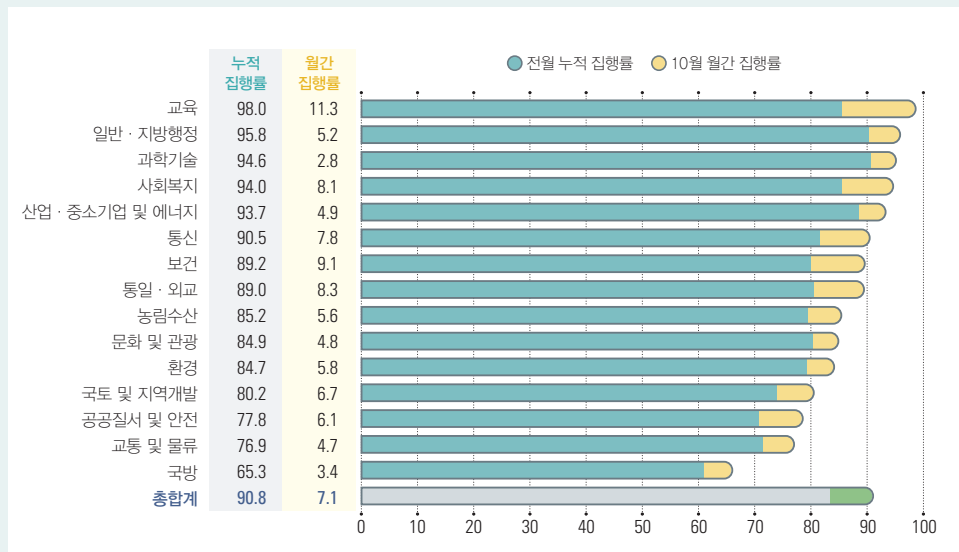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

10월 누적 집행률
90.8%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10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16.7조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90.8%를 집행하였다.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교육(98.0%), 일반·지방행정(95.8%), 과학기술(94.6%), 사회복지(94.0%)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65.3%), 교통 및 물류(76.9%), 공공질서 및 안전(77.8%)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0월 월간 집행액은 17.1조 원(7.1%)이며, 분야별로는 교육(11.3%), 보건(9.1%), 통일·외교(8.3%), 사회복지(8.1%)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9.3조 원이며, 10월 누적 실적 집행실적은 45.5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7% 실행되었다(10월 누적 교부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3.4%).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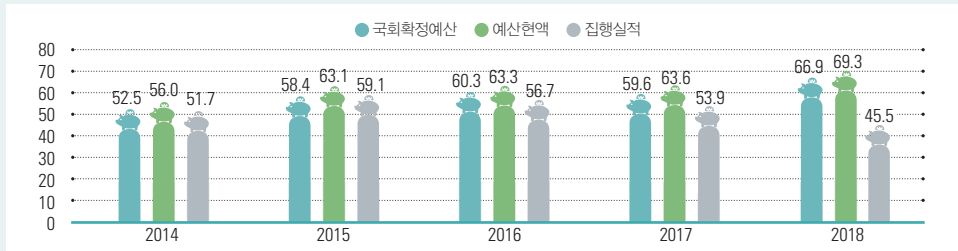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10월 누적 집행행률

65.7%

(단위: 조 원)



주: 2018년은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집행행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99.7%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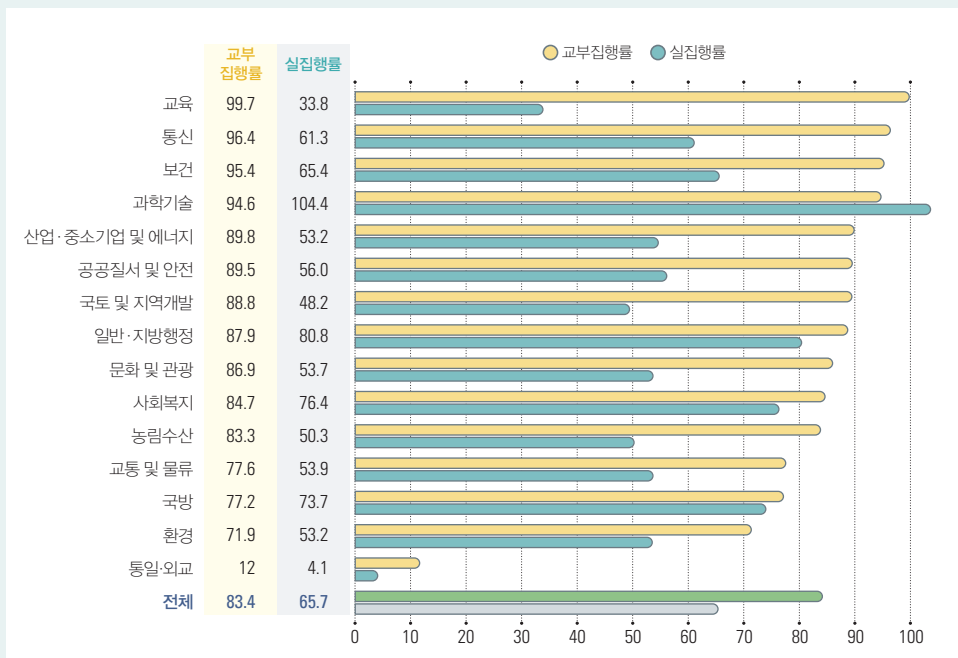
가장 높은 집행행률

104.4%

(과학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9조 5,084억 원, 농림수산 4조 7,031억 원, 환경 2조 4,695억 원, 문화 및 관광 2조 2,41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조 7,589억 원 실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집행률은 교육 분야가 99.7%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행률은 과학기술 분야가 104.4%로 가장 높다.

(단위: %)



주: 2018년 10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02 테마통계: 보건 분야

이번호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보건 분야**의 지출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복지
- 교통·물류
- 통신
- 통일·외교
- 환경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일반·지방행정
- 과학기술
- 농림·수산
- 보건**
- 교육
- 국방
- 문화·관광
- 공공질서·안전
-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분야 재정구조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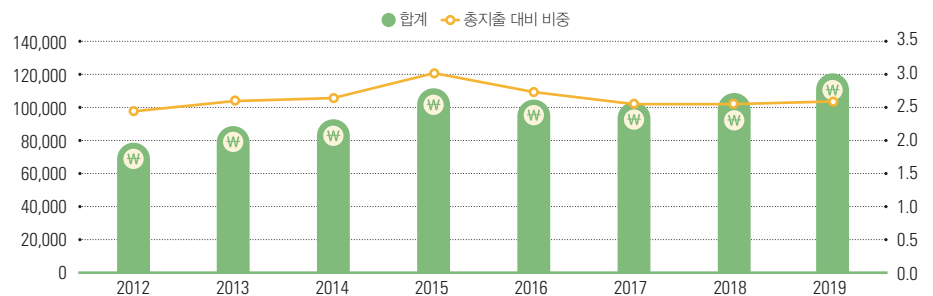
2019년 본예산
12.1조 원

보건 분야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2.5% 내외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보건 분야 지출은 전년도 대비 2.0조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3.0%로 가장 높다. 2019년(본예산 기준) 보건 분야 지출은 12.1조 원(총지출 대비 2.6%)이며, 2018년 본예산 대비 1.3조 원(11.6%) 증가하였다.

2019년 본예산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을 위한 지출이 7,720억원 증액되었다. 2019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정보화) 사업,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R&D) 사업,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등이 있다.

보건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합계 (비중)	77,722 (2.4)	87,665 (2.6)	91,713 (2.6)	111,881 (3.0)	104,749 (2.7)	102,808 (2.6)	108,574 (2.5)	121,203 (2.6)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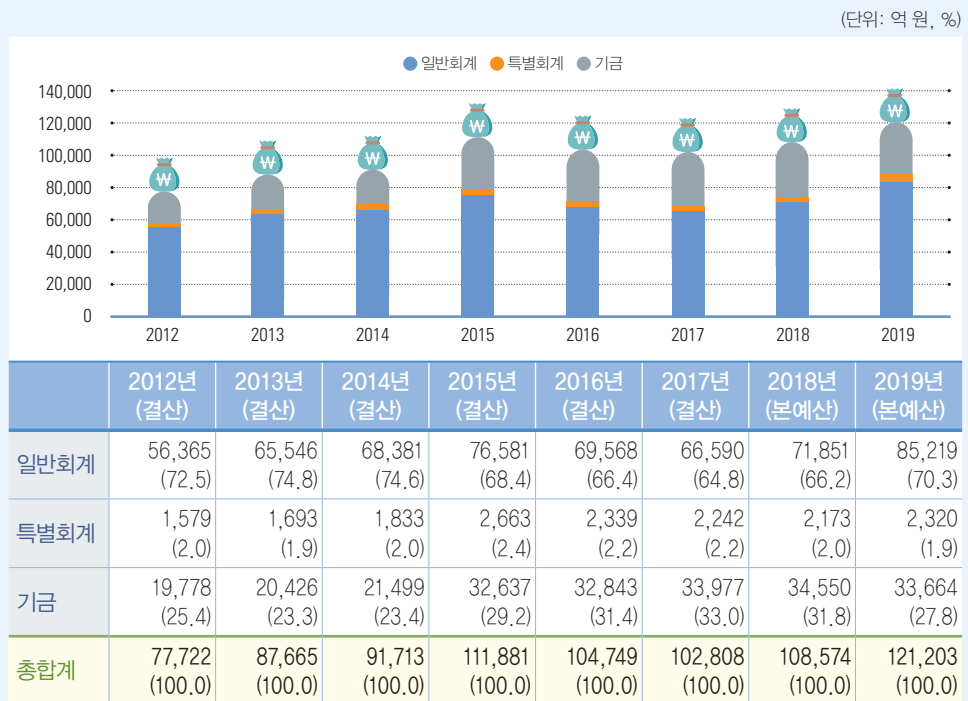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8.5조 원

특별회계
0.2조 원

기금
3.4조 원

2019년 본예산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은 일반회계 8.5조 원(보건 분야 총지출 대비 70.3%)¹, 특별회계 0.2조 원(1.9%), 기금 3.4조 원(27.8%)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보건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기금의 사업비 추이 (2019년 본예산)

보건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총 3개이다.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금별 운용 규모는 국민건강증진기금 3.1조 원(보건 분야 기금 규모 대비 93.0%), 응급의료기금 2,323억 원(보건 분야 기금 규모 대비 6.9%), 국유재산관리기금 20억 원(보건 분야 기금 규모 대비 0.1%) 순으로 크다. 즉,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전체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¹ 이하 비율은 모두 보건 분야 총지출 대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3.2조 원

응급의료기금

0.2조 원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17,651 (89.2)	18,256 (89.4)	19,298 (89.8)	26,399 (80.9)	30,561 (93.1)	32,555 (93.4)	32,209 (93.2)	31,321 (93.0)
응급의료기금	2,057 (10.4)	2,008 (9.8)	1,982 (9.2)	6,138 (18.8)	2,162 (6.6)	2,234 (6.4)	2,294 (6.6)	2,323 (6.9)
국유재산관리기금	70 (0.4)	162 (0.8)	220 (1.0)	100 (0.3)	119 (0.4)	52 (0.1)	48 (0.1)	20 (0.1)
합계	19,778 (100.0)	20,426 (100.0)	21,499 (100.0)	32,637 (100.0)	32,843 (100.0)	34,841 (100.0)	34,550 (100.0)	33,664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보건 분야 기금 사업비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구조

(2018년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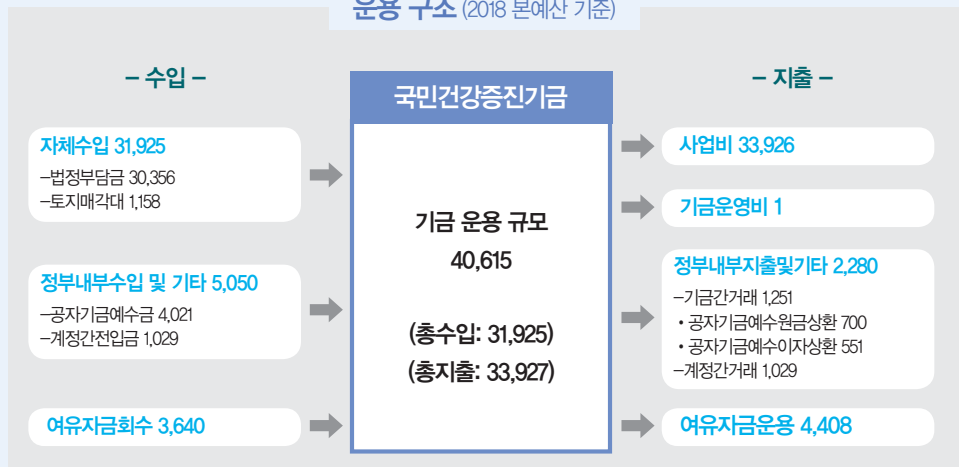
운용 규모

4.1조 원

보건 분야의 기금 중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설치되었다. 운용 규모는 2018년 기준 4.1조 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운용되며,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통계 작성 등에 사용된다.

(단위: 억 원)

운용 구조 (2018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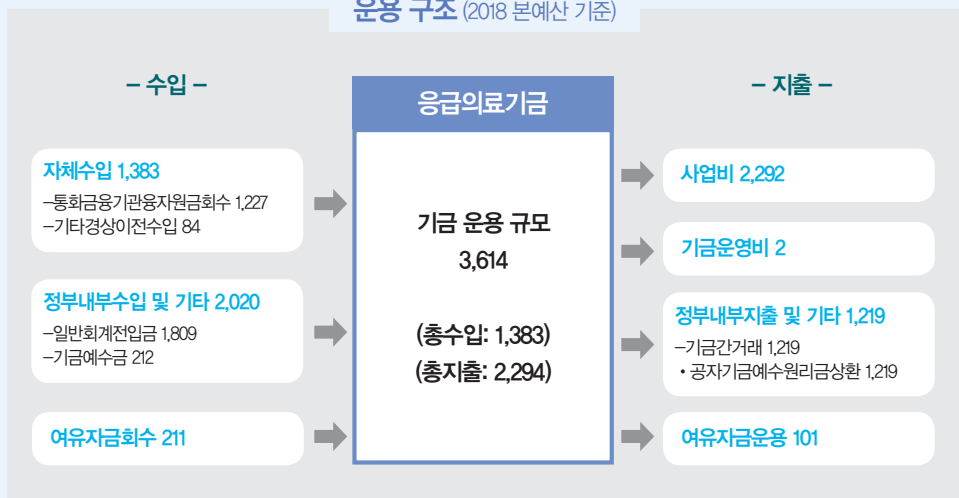
응급의료기금 운용 구조 (2018년 본예산)

운용 규모
0.4조 원

보건 분야에서 두 번째로 지출 비중이 큰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 설치되었다. 운용 규모는 2018년 기준 3,614억 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편(약 8.9%)이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징수 금액 중 일부, 응급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운용된다. 이 기금은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을 지급하거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지원할 때 사용된다. 또한 재해발생 시 의료를 지원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에도 사용된다.

운용 구조 (2018 본예산 기준)

(단위: 억 원)





부문별 현황 (2019년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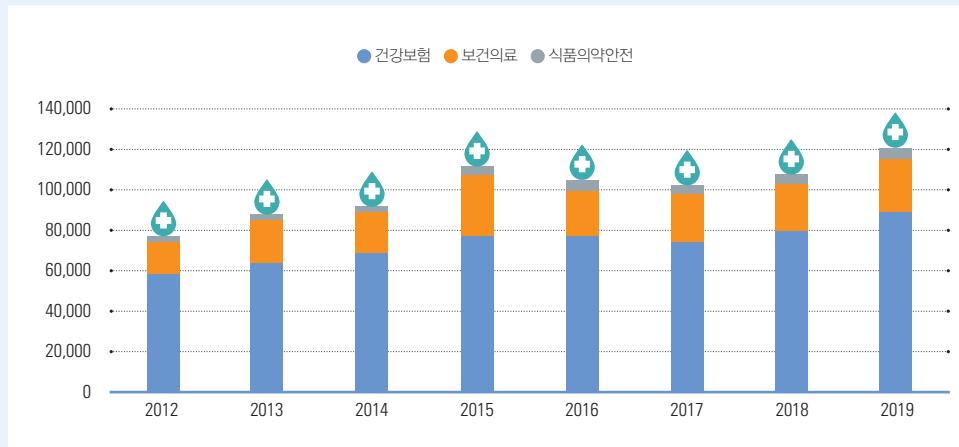
건강보험
9.0조 원

보건의료
2.6조 원

식품의약품안전
0.5조 원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 분야 지출에서 건강보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보건의료 부문,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크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건 분야 지출 대비 건강보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이며,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21.4%, 식품의약품안전 부문의 비중은 4.2%이다. 건강보험 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9년 본예산 기준 9.0조 원이며, 2012년(결산 기준 6.0조 원)부터 지출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과 식품의약품안전 부문도 2012년 결산 대비 2019년(본예산 기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단위: 억 원)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본예산)
건강보험	59,553 (76.6)	64,918 (74.1)	69,671 (76.0)	77,450 (69.2)	77,860 (74.3)	75,156 (73.1)	79,434 (73.2)	90,187 (74.4)
보건의료	15,733 (20.2)	19,924 (22.7)	19,026 (20.7)	30,778 (27.5)	22,825 (21.8)	23,440 (22.8)	24,420 (22.5)	25,930 (21.4)
식품의약품안전	2,436 (3.1)	2,823 (3.2)	3,016 (3.3)	3,652 (3.3)	4,065 (3.9)	4,212 (4.1)	4,719 (4.3)	5,086 (4.2)
합계	77,722 (100.0)	87,665 (100.0)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8,574 (100.0)	121,203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보건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사업

(2019년 본예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7.9조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0.3조 원

보건 분야의 주요 계속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예방접종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이 있다. 2019년 주요 신규 사업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정보화) 사업,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R&D) 사업,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등이 있다.

(단위: 억 원)

부처	사업명	2018년	2019년	비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52,001	59,721	계속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731	19,011	
	국가예방접종 실시	3,421	3,284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정보화)	—	78	신규사업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R&D)	—	60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	—	77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426	454	계속사업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6.0조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9조 원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²,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징금 수입액의 50%³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일반회계)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720억 원 증액(14.8%)한 5조 9,721억 원을 편성하였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건강보험료 예산수입액의 6%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21억 원 감액(3.7%)한 1조 9,011억 원을 편성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 재원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과징금 수입의 50%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해당연도 담배 부담금 예산 수입의 65%를 초과할 수는 없다.



국가예방접종실시 (2019년 본예산)

3,284^{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여 육아부담을 낮추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감염병 퇴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B형 간염, 소아인플루엔자, 수두, 일본뇌염 등 1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을 접종한다. 2019년 본예산에서는 2018년 본예산(3,421억 원) 대비 137억 원(4.0%) 감액된 3,284억 원 편성되었다⁵.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019년 본예산)

454^{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2019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6.6%) 증액한 454억 원이 편성되었다. 증액된 금액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9개소를 확대하고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며, 급식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정보화) (2019년 본예산)

78^{억 원}

정부는 2019년 보건 분야의 주요 신규 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정보화) 사업에 78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2020년 추진될 정밀의료 코호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생체의료정보 수집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고에서 전액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본인의 동의 하에 정보제공자 300명을 모집하여 헬스케어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 분석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단 운영비 28억 원, 폐쇄환경시스템 구축비 20억 원, 활용 서비스 지원 30억 원으로 사용된다.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2019년 본예산)

77^{억 원}

2019년 신규 사업인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R&D)은 기업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용자 맞춤형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이크로 의료로봇 제품을 실용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시장으로 조기에 출시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 (2019년 본예산)

60^{억 원}

그 외에도 2019년 신규 사업인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R&D) 사업은 석사, 박사학생과 박사후(Post-Doc) 연구원을 글로벌 대학과 연구소, 기업, 병원에 파견하여 연수 및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다. ^{내각}

5.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21억 원, 독감 예방접종 백신 4개국의 전환 61억 원, 중학생 독감 예방접종 142억 원, 예방접종 시행비 인상을 위한 17억 원 증액으로 2019년 편성 금액을 3,506억 원으로 수정하였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한류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한류'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10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간의 문화교류 행사인 '한국 음악의 올림, 한 불 우정의 콘서트'로 우리나라 대표 문화 상품인 케이팝(K-POP)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한류 연관어
- 프랑스
 - 서울대
 - 케이팝
 - 영화
 - 대통령
 - 파리
 - 강남
 - 발전
 - 이정표
 - 영동대로
 - 문화
 - 공항
 - 방탄소년단
 - 홍보대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11.9.), 수집기간: 2018.10.1.~10.31.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삼아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국제 문화예술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6조 4,606억 원(총지출 428.8조 원 대비 1.5%)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2조 7,200억 원(문화 및 관광 분야 대비 42.1%)이다.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 부문의 8.4%인 2,279억 원(기금은 영비를 제외한 사업비¹⁾만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문화 및 관광 분야	44,772	49,671	52,410	61,963	67,212	70,382	64,606
문화예술 부문	17,785	20,785	21,305	23,359	25,351	27,430	27,200
문화예술진흥기금	1,178	1,200	1,817	1,929	2,138	2,160	2,279

주: 총지출·결산 기준(2017년은 추정 및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최종예산이며, 2018년은 본예산)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지출 2,462억 원은 사업비 2,279억 원(문화예술 부문)과 기금운영비 183억 원(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8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구조를 보면 수입 부문은 출연금 242억 원 등 자체수입 614억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0억 원, 복권기금 등 3개의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1,821억 원 등 정부내부수입 2,321억 원, 통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유자금회수 546억 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지출 부문은 사업비 2,279억 원, 기금운영비 183억 원, 복권기금으로의 전출금(정부내부 지출) 25억 원, 여유자금운용 994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총계·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2018년 주요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일 프로그램(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기금운영비(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를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문화예술 부문에 포함된다. 2018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비는 3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며,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1,480억 원), 예술창작 역량강화 사업(478억 원), 지역문화 예술진흥 사업(321억 원) 등의 단위사업이 있다.

(단위: 억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금액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1,181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	299
	소계	1,480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 지원	342
	예술인력 육성	136
	소계	478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247
	지역문화 예술지원	74
	소계	321
기금운영비	-	183
계		2,462

주: 총지출·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1,181억 원)과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299억 원)이 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은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7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해주고 영화·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 국내여행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은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운동(예술나무운동) 등으로 문화·예술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다각화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신진 예술가를 육성하고 아르고 크라우드펀딩(온라인 기반 모금 플랫폼)으로 문화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창작 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창작 지원 사업(342억 원)과 예술인력 육성 사업(136억 원)으로 구성된다.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 예술가(단체)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작품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예산으로 아르고미술관, 인사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학작가 90명²을 선정하며 1인당 아르고문학창작기금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력 육성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초 예술을 이끌어갈 신진 예술가 및 현장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는 35세 이하 연극, 무용, 기획 등 7개 분야의 예술자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거나 창작활동 시연·발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의예술 인력센터, 예술가의 집도 운영하며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기초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 등의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한 사람당 큐레이터는 최대 월 160만 원(최소 140만 원), 에듀케이터는 최대 140만 원(최소 130만 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예술진흥 사업은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사업(247억 원)과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74억 원)으로 구성된다.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국의 역사·문화적 명소를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공연예술제를 특성화하고 국제 경쟁력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공모를 받아 공연예술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를 개최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갖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달성을 목표로 지역 공연장의 상주단체를 선정하여 지역 공연장의 자원(연습 및 발표공간, 인력)과 공연단체의 자원(제작능력, 단원)을 연계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우수 공연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있다. ^{나관}

² 2019년은 8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럽 주요국의 2019년 경제·재정 전망 및 예산안 주요내용

심혜인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hyein@kpfis.kr

이번 호에서는 최근 발표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2019년 경제·재정 전망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2018년 10월 29일 발표한 가을예산안 2018(Autumn Budget 2018)에 따르면,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은 2018년과 2019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치보다 각각 0.3%p 하향, 0.4%p 상향 조정된 1.3%, 1.6%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18년 2.6%, 이후 2023년까지 2.0%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실업률은 2018년 4.0%, 2019년 3.7%까지 하락하며 1975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영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3월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수정하였다. 기본 수입(underlying receipts)은 고용 수준의 증가로 인해 2018-19년 74억 파운드, 2022-23년에는 141억 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

영국 OBR의 경제 전망¹

	2017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1.7	1.3	1.6	1.4	1.4	1.5	1.6
1인당 GDP(GDP per capita)	1.1	0.6	1.0	0.9	0.9	1.0	1.1
GDP 주요 구성(Main components of GDP)							
가계소비(Household consumption) ²	1.8	1.3	1.2	1.2	1.3	1.4	1.5
일반정부소비(General government consumption)	-0.1	1.0	2.1	2.0	1.7	1.6	1.6
고정투자(Fixed investment)	3.3	1.0	2.9	1.8	1.8	1.9	2.0
기업(Business)	1.8	0.5	2.3	2.1	2.1	2.1	2.2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7	-0.2	5.7	3.3	1.8	0.9	1.4
개인주택(Private dwellings) ³	8.1	7.0	3.0	-0.1	0.8	2.3	1.9
재고증감(Change in inventories) ⁴	-0.5	-0.2	0.1	0.0	0.0	0.0	0.0
순수출(Net trade) ⁴	0.7	0.2	-0.1	-0.1	0.0	0.0	-0.1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Inflation)	2.7	2.6	2.0	2.0	2.1	2.1	2.0
고용(Employment, 백만 명)	32.1	32.4	32.7	32.9	33.0	33.1	33.2
실업률(LFS unemployment, % rate) ⁵	4.4	4.0	3.7	3.8	3.9	3.9	4.0
시간당 생산성(Productivity per hour)	0.8	0.8	0.8	0.9	1.0	1.1	1.2

1.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한 값이므로 합계가 안 맞을 수 있음

2. 가계 및 비영리기관 포함

3. 이전비용(transfer costs) 및 비생산자산 포함

4. GDP 성장기여도이며, %포인트임

5.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자료: 영국 재무부, 「Autumn Budget 2018」, 2018.10.29.

망하였다. 또한 기본 지출(underlying spending)은 실업률 감소로 인한 복지지출의 감소와 채무이자 등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 2018-19년 45억 파운드, 2022-23년에는 41억 파운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2019-20년 1.4%에서 2023-24년 0.8%로 감소하며 예측기간 동안 GDP 대비 3.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19-20년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국가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24년까지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대한 예산지원을 205억 파운드 증액
- 2019-20년에는 인적 공제(personal allowance)를 1만 2,500파운드까지 인상

영국의 재정전망

2018년 3월 이후 OBR의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치 변화(십억 파운드)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Spring Statement 2018	37.1	33.9	28.7	26.0	21.4
Spring Statement 2018 이후 총 전망치 변화 ¹	-12.7	-13.1	-12.8	-15.9	-19.3
수입 전망(Receipts forecast)	-7.4	-8.0	-8.0	-11.2	-14.1
지출 전망(Spending forecast)	-4.5	-4.1	-3.7	-3.5	-4.1
분류 및 기타 변화(순부가가치세 환급 변화 포함)	-0.8	-1.1	-1.1	-1.2	-1.2
Spring statement 2018 이후 정부결정 총 효과	1.1	10.9	10.7	13.7	18.8
Spring statement 2018 이후 총 변화	-11.6	-2.1	-2.1	-2.2	-0.6
Budget 2018	25.5	31.8	26.7	23.8	20.8

1. OBR이 2018년 10월 발표한 '경제 및 재정 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의 표 1.3에 해당하며,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가 안 맞을 수 있음

OBR의 GDP 대비 차입 비율 전망

	실적 2017-18	전망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공공부문 순차입	1.9	1.2	1.4	1.2	1.0	0.9	0.8
경기조정된 공공부문 순차입	1.9	1.3	1.6	1.3	1.1	0.9	0.8
조약 적자(Treaty deficit) ¹	2.0	1.3	1.5	1.3	1.3	0.9	0.7
메모: 산출 갭(output gap) ²	0.1	0.3	0.3	0.2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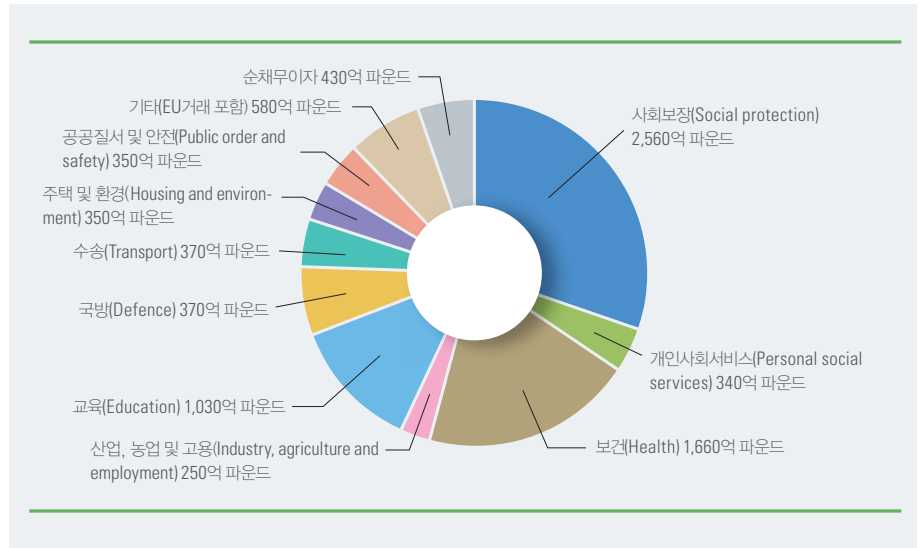
1.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2. 잠재(potential) GDP 대비 산출갭 비율

자료: 영국 재무부, 「Autumn Budget 2018」, 2018.10.29.

-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을 1,000파운드까지 인상하고 법적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도 인상
- 2018-19년과 2019-20년에 걸쳐 10억 파운드의 방위비를 투자하고, 2019-20년에는 반 테러 경찰에 1억 6,000만 파운드를 투자
- 국가생산성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NPIF)을 310억 파운드에서 370억 파운드로 증액하고, 2020-25년까지 288억 파운드에 달하는 대규모 주요 도로 투자 패키지 지원
-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를 일시적으로 1백만 파운드로 증가하고, 비 주거용 구조물과 건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의 매출에 대하여 2%의 세금 부과
- 2016년 이후 브렉시트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 파운드 편성

2019-20년 영국의 공공부문 지출



자료: 영국 재무부, 「Autumn Budget 2018」, 2018.10.29.



독일

독일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는 2018년 10월 11일 발표한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에서 독일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을 모두 1.8%로 전망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지난 4월 봄 전망치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각각 0.5%p와 0.3%p)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2009년 이후 10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고용 인구는 2019년까지 4,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독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가 2018년 7월 6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2년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르면, 201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60% 미만으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52%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9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3,568억 유로로 인프라 투자, 교육, 주택 및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독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및 기후기금, 지방투자기금, 건설지원기금 및 디지털 인프라(Digitale Infrastruktur) 특수 자산 등에 24억 유로 투자

독일의 경제 전망

구분	201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수 (2010=100)	전년대비 증가율(%)					
1. 실질 GDP(Real GDP, Chain index)	113.66	2.2	1.8	1.8	1.8	1.3	1.3
2. 잠재 GDP기여도(% p, Potential GDP)	2,919.2	1.7	1.7	1.7	1.7	1.7	1.5
– 노동(Labour)		0.5	0.5	0.5	0.4	0.3	0.1
– 자본(Capital)		0.4	0.4	0.4	0.5	0.5	0.5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0.7	0.8	0.8	0.8	0.9	0.9
	3,277.3	3.7	3.5	3.8	3.7	3.2	3.2
실질 GDP의 구성(Components of real GDP, chain index)							
3. 개인소비지출(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¹	110.26	1.8	1.6	2.0			
4. 정부소비지출(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114.11	1.6	1.4	2.5			
5.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18.21	2.9	3.0	2.7			
6. 재고증감(GDP성장기여도 Changes in inventories)	-	0.1	0.1	0.0			
7. 수출(Exports)	133.72	4.6	2.8	3.7			
8. 수입(Imports)	131.61	4.8	3.6	4.9			
GDP 성장 기여도 (Contribution to GDP growth)		-in percentage points-					
9. 국내수요(자본제외 Domestic demand)	-	1.8	1.8	2.1			
10.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	0.1	0.1	0.0			
11. 재화 및 서비스 수지(External balance of goods and services)	-	0.3	-0.1	-0.2			

주 1) 2017년 실적은 2018년 8월 발표한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통계이며, 2018-22년 전망은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가 2018년 10월 발표한 가을경제전망 값임

2) 다른 설명이 없을 시 연평균 성장률(%)임

1. 민간 비영리단체 포함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19」, 2018.10.11.

독일의 2019년 예산안 및 2018-22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 유로, %)

구분	실적 2018	예산안 2019	재정계획		
			2020	2021	2022
재정지출(Ausgaben)	3,436	3,568	3,632	3,693	3,755
전년 대비 증가율(Veränderung ggü. Vorjahr in Prozent)	+3.9	+3.8	+1.8	+1.7	+1.7
재정수입(Einnahmen)	3,436	3,568	3,632	3,693	3,755
조세수입(Steuereinnahmen)	3,213	3,330	3,338	3,468	3,597
신규차입(Nettokreditaufnahme)	-	-	-	-	-
메모 : 투자 지출(nachrichtlich: Ausgaben für Investitionen)	374	379	379	379	379
디지털 인프라 투자(Investive Zuweisungen an das Sondervermögen „Digitale Infrastruktur“)	24				

주: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가 안 맞을 수 있음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Pressemitteilungen」, 2018.7.6.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9년 교육, 과학 및 연구 분야에 237억 유로 지출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950억 유로 지출
-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의 가처분소득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이 상향 조정되며,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2019-22년 동안 총 55억 유로 지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2019년 장기 실업자의 자격, 배치 등에 10억 유로 이상 투입
-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2020년과 2021년 각각 10억 유로 지출하고 주택아동수당제도 (Baukindergeld)를 통해 자가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촉진
- 연방경찰과 관세청의 인력 증원을 위해 연방 내무부의 예산을 2017년에 비해 30억 유로 증액
-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OECD 예산은 약 97억 유로로 2017년에 비해 10억 유로 이상 증가하고 2019년 국방 예산은 2018년에 비해 40억 유로 증액

프랑스

프랑스 재무부가 2018년 9월 24일 발표한 2019년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PLF)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1.7%를 달성하며 201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의 경제 전망

구분	Stability Programme 2017		2018년 예산안 개요	
	2017	2018	2017	2018
국제 환경(International environment)				
유가(Brent, USD/barrel, annual average)	54	53	52	52
환율 USD/EUR(annual average)	1.06	1.06	1.13	1.18
프랑스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World demand for French exports)	3.4	3.6	4.0	4.0
프랑스(France)				
GDP	1.5	1.5	1.7	1.7
수입(Imports)	3.6	3.6	3.6	3.6
개인소비지출(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1.2	1.5	1.3	1.4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7	2.7	3.0	3.9
비금융기업(a/w Non-financial corporations)	3.2	3.0	3.7	3.7
수출(Exports)	3.4	3.7	2.5	3.9
성장에 대한 대외무역 기여도(in p.p. of GDP)	-0.1	0.0	-0.4	0.1
성장에 대한 재고증감 기여도(in p.p. of GDP)	0.1	0.0	0.4	0.1
CPI	1.2	1.1	1.0	1.1

주: 다른 설명이 없을 시 연평균 성장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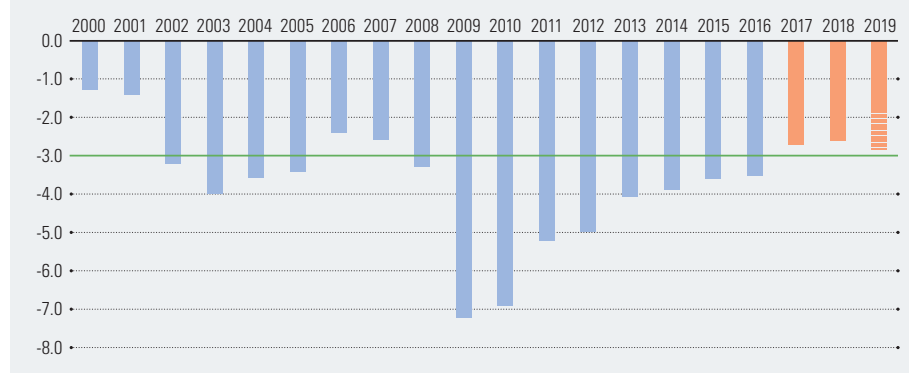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2018.9.24.

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1.8%, 2019년에는 1.4%로 전망하였으며 고용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2018년과 2019년 구매력이 각각 1.6%, 1.7%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 또한 서서히 회복되어 2019년에는 1.7%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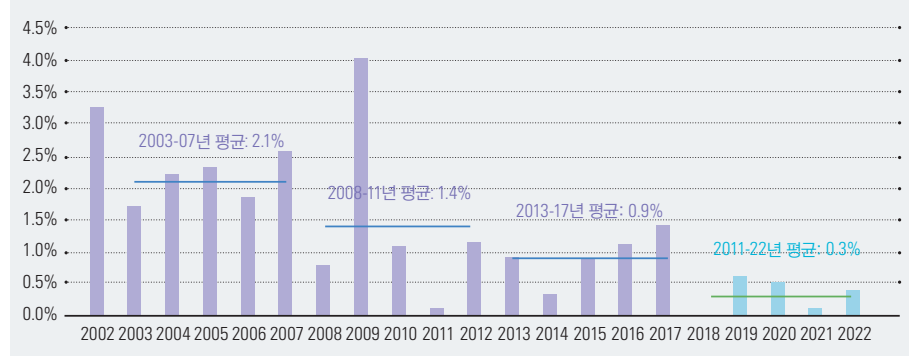
프랑스의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9%로 3년 연속 3% 이하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18-22년 공공재정계획법(Public Finance Planning Act)에 따라 중기 목표(the Medium-Term Objective, MTO)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2%p 이상 축소, 정부지출 3%p 감축,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1%p 축소, 채무 5%p 감소를 이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수지 적자 및 재정지출 전망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2018.9.24.

프랑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0.5%와 0.6%로 경제성장률보다 완만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9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49억 유로 감소한 2,914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98.6%로 전년 대비 0.1%p 소폭 감소하고 2022년에는 92.7%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9월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최저 의무 부담 축소
- 저소득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직업수당을 2019~21년 사이 매년 20유로씩 인상
- 청소년과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강화에 25억 유로 투자
-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빈곤개선 정책에 4년간 85억 유로를 투자하고 국방 예산에 17억 유로 증액
-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ecology transition) 가속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상품에 환경세 부과 ^{내량}

프랑스의 2019년 예산안

(단위: 억 유로)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8년 수정예산	증감	2019년 예산안
재정지출(Dépenses BG+PSR)	3,828	3,865	3,868	3	3,908
세출(Dépenses du budget general)	3,226	3,263	3,259	-4	3,288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02	603	609	6	620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8	403	403	0	405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64	199	206	6	215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56	2,866	2,929	63	2,78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38	132	134	1	125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55	10	-8	-18	6
총재정수지(Solde Etat - hors FMI)	-677	-857	-813	44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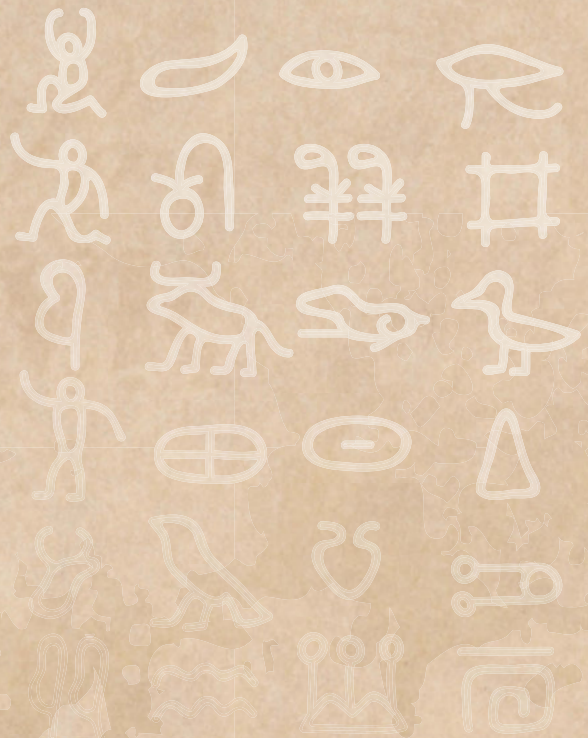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2018.9.24.

재정발전이 촉진한
수학과 문자

고대 문명의 발전과
재정의 상관관계

김동욱

kimdw@hankyung.com



Ancient Civilization

문명의 등장에
큰 역할을 한 재정활동



“오로지 쓰기에 전념하도록 해라... 서기만큼 좋은 직분도 없단다. ...나는 네가 엄마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단다. 아울러 책의 미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BC 2000년경 이집트의 관료였던 두아케티는 아들을 서기학교로 보내기 위해 나일강을 따라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글을 적는 서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옛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공산당 서기장(書記長)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차지했던 것에 필적할 정도로 서기는 이집트에서 부와 명망, 높은 지위 등을 누릴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은 문자를 '신의 말(mdw·w-ntr)'로 불렀다. 그리고 문자를 따오기 머리를 가진 지식·문자·지혜의 신 '토티(Thoth)'가 내려준 선물이라고 믿었다. 1800년 전 그리스인들은 이런 이집트인의 전통을 감안해 이집트 문자를 '신성한 조각'이란 뜻의 '히에로글리피카(ιερογλυφικά)'라고 불렀다. 이처럼 문자를 남기고, 읽고, 보존하는 행위는 인류사의 초기 단계부터 중시됐다. 그리고 이런 기록의 중심인 문자는 경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문자 자체가 숫자와 함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창조된 측면도 적지 않았다.

우선 학자들은 문자의 시원적 형태로서 뼈나 돌, 나무 등에 새겨졌던 새김눈에 주목한다. 독일 빌딩스레벤에서는 41만 2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규칙적인 간격의 절단선이 그어진 뼈 몇 개가 발견됐다. BC 9000년경 자이르 이상고에서 발견된 뼈에도 수많은 새김눈이 있었다. 이들 눈금들은 숫자나 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새김눈은 아마도 사냥의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한 계산 막대였을 수도 있다.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도 경제활동은 문자 창출의 근원 역할을 했다. 6000년 전 수메르에서는 사회가 팽창하면서 천연자원, 생산품, 노동자, 관세, 경작지, 공물, 왕실과 사원의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등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했다. 장부에 기록하는 주요요소인 재산 표시는 가장 오래된 도해 상징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메르인은 또 가축이나 물건의 개수를 적어놓는 물표(物標)도 고안했다. 하지만 단순히 기억을 보조하는 표시 정도로는 역부족이었고 문자가 탄생했다. 문자와 숫자 표기는 가장 초기 형태의 재정활동을 위해 창조됐던 셈이다.

실제 인류사 초기 문자 기록의 상당수는 일종의 재정 관련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15만 개의 설형문자 비문 가운데 75% 이상은 장부기록과 행정기록이다. 이들 대부분은 상품과 사람, 보수 등의 일람표로 작성됐다. 각종 재정기록이 등장한 이후에야 종교 텍스트와 천문학 기록, 의학 관련 문서, 처방전 등이 출현했다.

수메르에서도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특별학교를 만들어 최초로 공식적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스승이 작성한 속담과 문학적인 토막글, 신의 이름 등을 스승의 점토판 뒷면에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 계급이 등장했고, 대부분 농업 분야에 고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서와 세계 최초의 변호사가 됐다.

후기 청동기시대 그리스 크레타섬 등지에서 사용된 선문자B(線文字B·Linear B)가 쓰인 점토판 대부분도 물건의 품목과 그 수를 표시하는 수사였다. 로마제국 말기 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서 주로 사용된 게르만족의 고유문자인 룬 문자도 '소유권'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활용된 측면이 컸다. 귀중품의 주인이나 만든 사람을 표시하는 용도 등으로 많이 쓰인 것이다. 400년경 덴마크의 유명한 금세공품인 갈레투스 황금 뿔에는 '나 친절한 흘레바가스티르, 흘레베게스트가 이 뿔을 만들었다'고 새겨져 있다. 문자의 탄생과 확산에는 종교적 요인, 문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못지않게 경제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문자와 숫자의 탄생 못지않게 인류사 최초의 '법(法)'이 등장하는 데에도 재정의 발전은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BC 1792~1750년)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재통일한 군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lex talionis)'란 문구로 널리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BC 1772년경까지 작성 연대가 올라가는 이 법전은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282개 법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상당수는 경제 관련 조항이고, 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초기 단계 국가의 재정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들이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신전이나 왕궁의 재산을 훔친 자는 처형한다'거나 '왕궁에서 훔친 장물을 인도받은 자도 처형한다'는 식으로 권력자, 일종의 국가재정 집행자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강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만일 누군가가 황소나 양, 나귀나 돼지 혹은 배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 또는 왕궁의 것이라면 30배로 갚아야 하며 타인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한다'고 명기해 국가 재산이 민간의 재산보다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전에는 당시 경제 발전상이나 국가 재정의 수준을 짐작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법전에는 거짓증언과 절도, 은닉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고 노동, 재산, 상거래, 결혼, 이혼, 상속, 입양, 농업, 급여, 임대료에 관한 사법적 문제도 다루고 있다. 바빌로니아와 외국에서 노예를 사고파는 것도 주요한 주제였다. 그중 32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귀나 팔, 다리 등 신체를 자르는 것을 언급한 곳도 수두룩하다. 역사학자들은 이 법전에서 형벌조항이 두드러지게 많고, 이전까지 단순한 배상의 대상이던 범죄자에 대해 사형으로 벌한다는 데서 '치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사회였다'는 사회상을 추론하곤 한다.

법전에는 또 국내 상업과 국제 교역을 장려하기 위한 '카룸(karum)'이라는 곳을 두고 '상인들의 감독(와킬 탐카리, wakil tamkari)'이 조직을 대표토록 했다. 이 법전에 기록된 형벌의 특징은 보복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라는 구절이 압권이다. '동등한 신분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릴 경우, 부러뜨린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라는 구절까지 합쳐져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물론 불평등 사회였던 당시 현실대로 보복도 불평등하게 이뤄졌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1미나의 은을 지불해야 했지만, 피해자가 노예인 경우에는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아버지를 아들이 때리면 한손을 자른다'라거나 '임산부를 때려 유산하면 5 세겔의 돈을 갚고, 임산부까지 죽으면 때린 사람의 딸을 죽인다' 같은 법규도 있다고 한다. 물론 유산한 여인의 신분이 귀족·지도층 인사나 노예냐, 아니면 중간층 사람이냐에 따라 갚을 돈이 2, 5, 10세겔로 차이가 나기는 했다. '아이를 잘못 돌본 여인의 유방을 자른다'라거나 '수술 후

에 귀족이 죽거나 눈을 잃으면 수술한 의사의 손목을 자른다'는 식으로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자면 야만스런 느낌이 드는 구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이유로 잘못 지은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석공이 목숨을 내놔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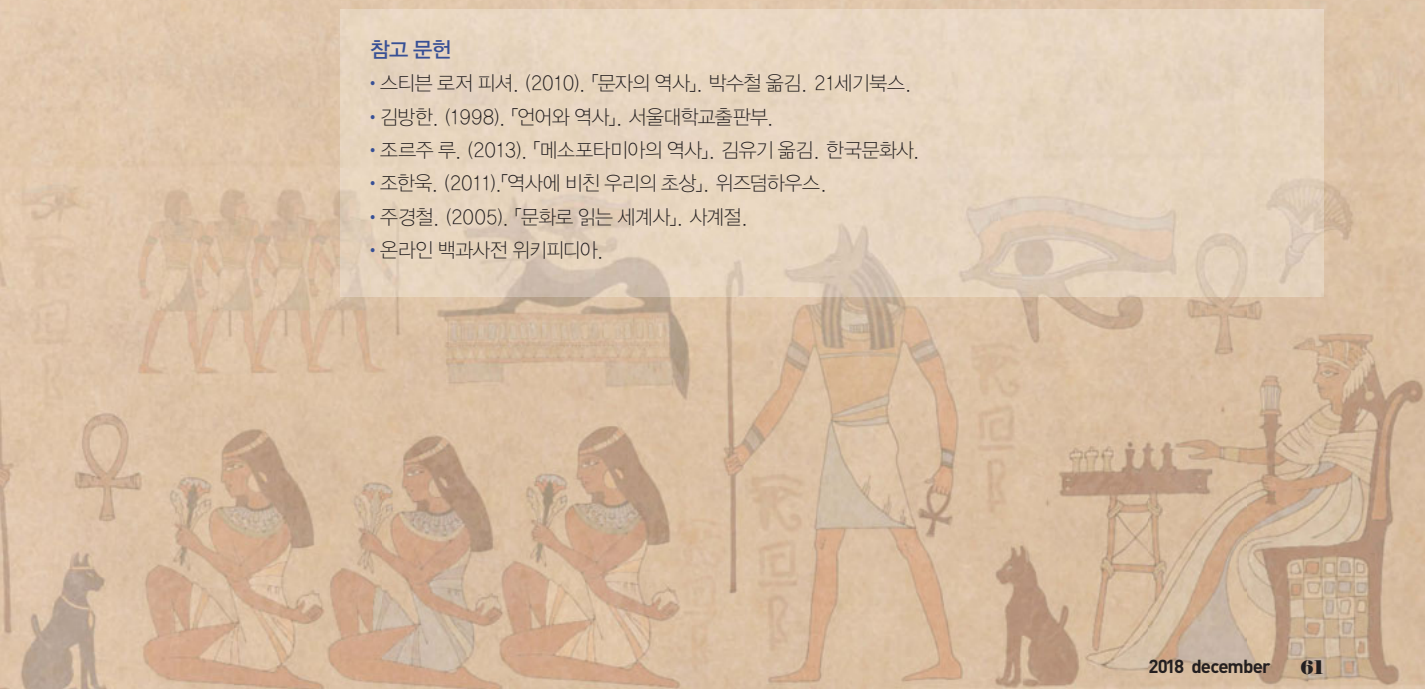
하지만 깜짝 놀랄 만큼 합리적인 구절도 적지 않다. 특히 '계약'의 중요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그 사람의 부인이 아니다'며 '혼인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자의 잘못된 행동 탓이 아니라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 측에게 결혼 당시 가져왔던 지참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증인이나 계약서 없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노예에게서 금, 은, 노예, 소, 양, 노새 등을 구매하거나 넘겨받은 자는 도둑으로 간주해 사형에 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증인이나 계약서 없이' 거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도 '과학적'이었다. 원래 재산 소유자가 특정 물건이 그의 재산이었음을 말해줄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물건 구입자도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인이 있다고 맞서면 증인을 데려올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구입자가 판 사람과 증인을 데려오지 못하고 원 소유자가 믿을 만한 증인을 데려오면 구입자가 도둑으로 판정돼 사형을 당했다. 반대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다는 주장이 무고죄가 내려져 사형에 처해진다. 양쪽에서 증인을 데려오고 증인이 모두 신빙성이 있을 경우, 물건을 판 상인이 도둑으로 판정돼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초기 형태의 재정활동의 등장은 국가의 성립은 물론 문자와 숫자, 법률의 발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등장해 재정활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문자도, 숫자도, 법도 갖추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재정은 알게 모르게 문명의 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셈이다. **법률**

참고 문헌

- 스티븐 로저 피셔. (2010). 「문자의 역사」, 박수철 옮김. 21세기북스.
- 김강한. (1998). 「언어와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르주 루. (2013). 「메소포타미아의 역사」, 김유기 옮김. 한국문화사.
- 조한욱. (2011). 「역사에 비친 우리의 초상」, 위즈덤하우스.
- 주경철. (2005). 「문화로 읽는 세계사」, 사계절.
-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농촌 일손돕기 및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한국재정정보원은 11월 23일(금)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수미마을 일원에서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 명과 수미마을 관계자, 양평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공 기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농촌과의 친목을 다지고, 마을 길 보수 등 자원 봉사를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중구에 위치한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기증하였다. **나량재정**

월간

나라 재정

DECEMBER
2018 Vol. 24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호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DECEMBER
2018 Vol. 24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9 772506 899700

ISSN 2508-8971

12